

바다 위 발전기 제주해안 점령하나

도, 2030년까지 전력량 100% 신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해상풍력발전 목표치 가장 높아 해안경관 훼손 우려 5.5MW급 발전기 340기 더 필요... 도 “계획 수정·보완”

제주특별자치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Carbon Free Island Jeju 2030)'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력 생산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2012년 수립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는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차단하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생산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목표량은 4311MW로 육상풍력발전설비 450MW 해상풍력발전설비 1900MW, 태양광 발전설비 1411MW, 기타 350MW이다.

이중 해상풍력발전설비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것은 육상풍력에 비해

풍력에너지 질이 좋아 생산성이 높고 각종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육상에 비해 대규모 단지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설비 2350MW를 설치하기 위해 풍력발전단지별 출력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규모의 BESS(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도내에서 생산된 전력을 내륙으로 역송전할 수 있는 양방향 해저연계선을 2022년까지 양방향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의 진행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해상풍력발전기로 제주의 해안경관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시 육상과

의 이격거리가 1.2km에 불과해 해안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관광객 이모씨(36·수원)는 “멀리서 해상풍력발전기를 볼때는 이국적인 느낌이 낫지만 막상 바로 앞에 있는 발전기를 보니까 답답하고 해안 조망권을 망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주의 고즈넉한 해안경관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달 현재 해상풍력발전 설비량은 30MW로 앞으로 1870MW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산중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5.5MW급 풍력발전기 340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에서 감영풍력발전단지에 5.5MW급 해상풍력발전기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설치했다. 외국산은 현재 8MW급 발전기도 나와 있어 앞으로 해상에 설치될 발전기 수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낙석위험 지역에 개설된 우회도로와 기존 산방산 진입로 사이의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공터가 행커기테이더운기차

행한 우회도로... 산방산 경관 해칠라

서귀포시 올 3월 준공 완료 개설 도로와 기존 도로간 완충지대 텅빈 공터로 남아 “자연경관 훼손” 지적 제기

서귀포시, 복토사업 계획 흙 확보 못해 추진에 난항

설치돼 있다. 이는 우천 시 기존 산방산 진입로에 낙석이 우려됨에 따라 통행을 금지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우회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는 철거돼야 하는 안내문이지만, 여전히 남아있어 우천 시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우회도로와 기존 산방산 진입로 사이에 낙석 시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 조성된 공터가 행한 모습으로 산방산의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주민들은 산방산 낙석위험 지역에 개설된 우회도로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훈배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기존 도로와 개설된 우회도로 사이에 복토를 진행하고 이후 조경을 실시해 주변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에 나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5년 12월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발주해 올해 3월 3일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개설된 우회도로가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로 양쪽 경사면(약 2만㎡)에 동백나무, 둔나무 등 나무 1만그루 등을 식재했다.

그러나 이후 기존 진입로와 개설된 우회도로 사이 공터에 복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짐에 따라 최근 현상변경을 신청, 승인받고 복토 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존 산방산 진입로와 개설된 우회도로 사이 공터의 복토를 위해 최근 현상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면서도 “최근 흙을 확보하지 못해 복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도입 2023년부터 본격” 도, 단기 보급 목표 확 낮춘다

2020년 13만5000 → 4만대

수정계획 도민 토론회'에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수행한 수정 보완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용역진은 전기차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2023년 이후부터 전기차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2022년 이전 전기차 시장이 본격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수정안에서는 2022년까지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이 유지되고, 이후 시장 확장을 위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이에 따라 수정 보완 용역에서는 제주도 전기차 도입 목표를 2020년에는 13만5000대→4만대로 대폭 감소 조정됐지만, 2025년에는 20만9000대→22만7000대로 상향하고, 2030년에는 총전과 같은 37만700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충전기도 2020년 2만6000기→2만2000기, 2025년 6만1000기→5만9000기, 2030년 7만5000기→7만6000기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대형차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이후 대형화물차를 시작으로 수소연료전지차(FCEV)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형차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이후 대형화물차를 시작으로 수소연료전지차(FCEV)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9년 사랑의 합동결혼식 어제 성산읍 혼인지서 거행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성희)는 22일 성산읍 혼인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어려움까지 사정없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5쌍을 대상으로 '2019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치렀다.

이날 합동결혼식은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5쌍의 신랑·신부와 가족, 친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촉점화, 주례를 맡은 김병수 전(前)서귀포시자원활용센터장의 성혼선언과 주례사, 양윤경 서귀포시장의 축사, 도립서귀포예술단 합창단의 축가로 순으로 진행됐다.

또 대한미용사협회서귀포시지부



22일 서귀포시 성산읍 혼인지에서 '2019 사랑의 합동결혼식'이 거행됐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의 후원을 통해 이들의 힘찬 앞날을 축복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988년부터

합동결혼식을 추진해 지금까지 총 251쌍의 저소득·다문화 동거부부들에게 특별히 행복한 날인 '결혼기념일'을 선물했다.

“지역생산물 전시장 유인책 필요”

서귀포시 입점기업 간담회

서귀포시가 천지연 관광지관리소에서 운영중인 지역생산물 전시장에 대한 관광객 유인책과 함께 입점기업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귀포시는 21일 지역생산물 홍보하고 전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물전시장 입점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2017년부터 천지연 관광지관리소에 지역생산물 전시장은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가한 13개 전시

장 입점기업 대표들은 “지역생산물 이 활발하게 유통되려면 전시장 입점기업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시장으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전시장을 지역생산물 판매보다 브랜드화하는데 이용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시에서 판매로 확대되는 로드맵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렌터카 수급조절 반대 소송에 따른 공동성명서

롯데 렌터카, SK 렌터카, AJ 렌터카, 한진 렌터카, 해피네트웍스 렌터카는 왜 렌터카 수급조절에 동참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자동차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항주변이나 제주 시내 및 서귀포 시내 권에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렌터카 1대는 자가용 4~5대 분량의 교통량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렌터카 과잉공급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최저가 요금이 형성됨에 따라 초보운전자인 관광객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렌터카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는 물론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인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권한을 이양 받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렌터카를 감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렌터카 128개 업체 중 119개 업체는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대기업 영업소 등 9개사는 감차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인 롯데 렌터카, SK 렌터카, AJ 렌터카, 한진 렌터카, 해피네트웍스 렌터카는 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통하여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영세한 도내 업체들도 손해를 보면서 감차사업에 동참하고 있음에 따라 대기업 영업소들도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렌터카 감차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 | | | | | | | | | | |
|---------|---------|-----------|---------|-----------|---------|---------|---------|----------|---------|
| 국내여행업분과 | 강인철 위원장 | 국제여행업제1분과 | 고만식 위원장 | 국제여행업제2분과 | 고범철 위원장 | 관광호텔업분과 | 송동희 위원장 | 휴양리조트업분과 | 이예승 위원장 |
| 일반숙박업분과 | 정양훈 위원장 | 전세버스업분과 | 고수은 위원장 | 렌트카업분과 | 강동훈 위원장 | 관광지업분과 | 고승철 위원장 | 테마관광지업분과 | 장지명 위원장 |
| 골프장업분과 | 이윤주 위원장 | 관광면세업분과 | 김희석 위원장 | 관광기념품업분과 | 신석중 위원장 | 외식업분과 | 부동석 위원장 | 관광해설제업분과 | 고규완 위원장 |
| 힐링체험업분과 | 박지혜 위원장 | 승마장업분과 | 노철 위원장 | 사업지원분과 | 고철원 위원장 | | | | |